

2012년 大入 완전 자율화

올 수능 등급·백분위·표준점수 모두 공개

인수위, 2013년부터 수능서 영어 분리

현재 교육부가 주관하고 있는 대학 입시가 2012년 이후 완전 자율화된다.

또 올해 중3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수능시험 과목이 현행 8개에서 5개로 축소되고 2013학년도부터는 수능에서 영어과목이 분리돼 문제는행식의 능력평가 시험으로 대체, 수능과목이 4개로 더 줄어든다. 이와 함께 현행 수능등급제는 영역별 등급표시 외에 백분위와 표준점수까지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올해부터 적용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경숙 위원장은 22일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발

표했다. <관련기관 3·7면>

인수위 발표에 대해 학생·교사 등 관계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자신의 정확한 점수를 알게 됐다는 점에서는 일단 찬성이지만,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역 대학들은 내키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인수위 발표에 따르면 ▲1단계 수능등급제 보완과 대입 자율화 조치 축소 ▲2단계 수능 응시과목의 최대 4개로 축소 ▲3단계 2012학년도 이후 대입 완전자율화 조치 등이 시행된다.

수능등급제 보완을 위해 올해 입시에서부터 표준점수와 백분위가 함께 제공된다. 동점자 양산 등으로 혼란을 야기했던 등급제는 시행 1년 만에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다. 또 학생부

와 수능 반영이 자율화되고, 일부에서 시험실시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도' 지원이 확대된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교육부의 대입전형 기본계획 수립 기능을 전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이양하고 2010학년도부터 계획을 대교협이 수립토록 했다. 이미 발표된 2009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은 그대로 적용된다.

2012학년도 입시에서는 현재 최대 8개인 수능 과목이 5개로 줄어든다. 탐구(사회·과학·직업)영역과 제2외국어·한문영역을 통틀어 선택 과목이 2개를 넘지 않게 한다는 방침이다. 2013학년도에 영어과목도 수능에서 제외되면 수능 과목수는 4개가 된다. 영어는 문제는행식으로 상시응시가 가능한 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한다고 인수위측은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올 상반기부터 대입 본고사 자율규제 제도를 도입하되, 다양한 학생선발방식이 정착되고 대입제도가 안정화될 때까지 자율규제를 통해 본고사를 금지토록 했다. 또 2013학년도부터는 현재 교육부 장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는 수능시험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완전 이양된다.

이경숙 위원장은 "대학이 정부의 획일적 규제와 점수 위주의 학생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을 발굴하는 선진화된 전형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며 "특히 학생의 특성을 개발하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학생들이 불필요한 학습부담 없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후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서 도정 업무보고를 위해 방문한 박준영 전남도지사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호남은하 국비 지원 계획 살아있다”

이 당선인, 박준영 지사와 면담서 밝혀

“지자체 불필요한 규제 해결 노력하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영산강운하 건설과 관련, “국가 재정 지원으로 하는 계획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4면> 이 당선인은 또 “규제 문제는 이번 정권과 관련된 큰 아젠다 중 하나”라며 “앞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를 열어,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와 박준영 전남지사와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서 박 지사와의 개별 면담에서 박 지사가 “(호남은하를)정부 재정으로 하겠다고 했다”고 민자로 하겠다고 했는데 “(재정 지원) 계획은 살아 있다. 그 계획이 바뀐 건 아니다. 민자로 하자는 게(제안) 나왔기 때문에 들어보

자는 것이다”고 답했다.

이 당선자는 이에 앞서 서울시청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번 정권에서는 (규제 완화)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며 “국가경쟁력강화특위를 열어 문제를 해결하다보면 1~2년이 지나면서 공무원들이 나서서 규제를 풀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당선자는 특히 지자체가 공단을 설립하는 데 불필요한 규제가 많다는 견이에 대해 “공단을 하든 뭐든 3~4년씩 걸린다는 문제가 나와 있다”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1년 안에 착공하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당장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이어 최근 지자체 간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

화에 대해 “어느 한쪽을 규제해서 다른 쪽이 발전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에 많은 페이버(favor: 혜택)를 줘야 한다”면서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겠지만 페이버를 줘서 발전시킴으로써 수도권에 있는 것보다 지방에 가는 게 좋도록 인프라를 만든다든지 하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이 당선인은 이밖에 “아쉬운 것은 지방도(규제를) 풀어주면 잘 할 수 있는데 될 수 있는 곳은 묶어놓고 안 되는 곳은 풀어놔야”고 지적한 뒤 “시도별로 사정이 다르니까 신속하게 중앙정부가 내려가서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pkpark@kwangju.co.kr



盧, 거부권 행사 시사

“정부조직 개편안 내용 문제 많고 절차 졸속”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2일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 “내용에 문제가 많아 심각한 부작용이 분명히 예상되고 그 절차가 매우 비정상적이며 대통령의 철학과 소신과 충돌하는 개편안에 서명하고 수용할 수 있을지 책임 있는 대통령으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까지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 진행 절차가 심각하게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이며 졸속으로 이뤄져왔다”고 비판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비정상적인 절차를 받아들여 이 정부에서 해야 하는 게 모두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대변인인 천호선 홍보수석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상황의 진전에 따라 (국회) 재의 여부를 논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라도 조직 개편 문제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지려면 해당 상임위에선 관련된 40여 개의 법안을 다 검토해야 한다”며 “각 상임위 내부와 외부에서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를 행정위에서 일괄해서 처리하려 하는 것은 국

정운영의 원칙에 맞지 않고 그 절차가 졸속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 뒤 “다음 국무회의 때 더 진전된 토론 자료를 준비해달라. 세계 각국의 사례도 더 보완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천 수석은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철학과 소신과 반하는 데 도장을 찍으면 (도장을 찍은 대통령에게) 책임이 발생한다”며 “차기 정부가 현 대통령의 철학에 현저하게 반하는 안에 무조건 도장을 찍으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 정부 들어서서 조직개편을 해도 그리 늦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국민을 모독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연합스

증시 공황

장중 1600선 붕괴

글로벌 증시의 폭락 영향으로 국내 증시가 장중 한때 1,600선이 무너지는 등 급락세를 연출하면서 투자자들도 거의 패닉(공황)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22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74.54포인트(4.43%) 급락한 1,609.02에 마감했다.

이날 낙폭은 지난해 8월 16일(125.91포인트) 이후 가장 큰 것으로, 역대 6번째 기록이었다.

코스닥지수도 37.07포인트(5.69%) 떨어진 614.80에 거래를 마쳐 10개월 만에 최저치로 주저앉았다.

/최경호기자 choice